산업통상자원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1. 3.(목) 11:00 < 11.4.(금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11. 3.(목)

담당 부서	통상법무정책관 통상법무기획과	책임자	과 장	고상미 (044-203-4870)
		담당자	사무관	이창우 (044-203-4878)

EU CBAM 대응을 위한 정부-산업계 소통 강화

- 산업부, 「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산업계 간담회」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11월 3일(목) 오후 4시 서울 대한상의에서 **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**(이하 본부장) **주재로 「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(CBAM) 산업계 간담회」**를 개최하였다.

【 회의 개요 】

- **일시/장소** : '22.11.3(목), 16:00 / 서울 대한상공회의소
- **주 재** :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
- **목 적** :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(CBAM) 입법 동향 공유, 산업계 준비현황 점검
- **참 석** : (협회) 철강협회, 비철금속협회, 석유화학협회
  (기업) 포스코, 현대제철, 노벨리스코리아, 대상 주식회사

□ 금번 간담회는 EU의 CBAM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**정부와 산업계가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**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○ EU는 **탄소누출*** **발생을 방지**하고 **역내·외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**하기 위해 CBAM 도입을 추진 중으로, 최근 집행위원회, 각료이사회, 유럽의회가 **최종법안 도출을 위해 3자 협의를 진행 중**이다.

* 국가별 환경규제 차이를 이용하여 탄소多배출 산업이 低규제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

○ EU 집행위원회(안)에 따르면 **'23.1월부터 3년 간 전환기간 개시 예정**으로, **同 기간에는 CBAM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되지는 않으나** 관련 **기업에는 수출 시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보고하도록 규정**되어 있다.

□ 참석자들은 그간 기업, 연구기관, 정부가 「**탄소통상자문단 회의**」* 등에서 **관련 협의를 지속**해 왔음을 평가하고,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**전환기간 및 CBAM 본격 시행에 대비**해 나가자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.

*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현황 파악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'22.1월 발족
국책연구기관(산업연, 에경련 등), 유관기관(KOTRA, 대한상의 등), 관련기업 등 참석

○ 철강협회는 우리나라의 **전체 철강 수출 가운데 EU向 수출 비중이 약 12.5%**라고 소개하며, **법안 내용이 아직 불확실하여 구체적 대응안을 마련하기 어려우나** 우리기업이 EU 기업에 비해 탄소배출 보고 주기, 범위 등 측면에서 **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심**을 가져 달라고 요청하였다.

○ 비철금속협회는 우리나라의 **전체 알루미늄 생산량 가운데 약 90%가 수출**된다는 점을 언급하며, 수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**정부가 CBAM 관련 정보를 공유**하고 **기업 대응을 지원**해 달라고 건의하였다.

○ 석유화학협회는 EU 집행위 입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, CBAM 도입 예고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**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소통**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, 우리나라 **배출권 거래제도가 EU 내에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EU와 협의**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□ 안덕근 본부장은 그간 **정부는 CBAM 입법안 발표**('21.7) **이전부터**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**우리 입장을 EU측에 선제적으로 제기**하는 등 **우리 기업의 이익을 대변**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하며, 앞으로도 **정부-산업계의 유기적 소통**을 통해 **법안 시행에 대비**하자고 언급하였다.

○ 정부는 **국내 탄소발자국 측정·보고·검증(MRV) 기반 확충** 및 **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***에 **중점**을 두고 있으며, 특히 **중소·중견기업의 CBAM 대응을 적극 지원**해 나가겠다고 설명하였다.

*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('23~'30년, 총 9,352억원, 철강·화학·시멘트 포함)
** 국내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을 위한 MRV 기반 강화 방안 논의('22.9, 비상경제장관회의)

○ 아울러 **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흐름**으로서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 요인이 모두 존재하는 만큼, 관련 기업도 **탄소감축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**하여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